

교양 자료집

**내란세력 완전청산!
사회대개혁 쟁취!**

**민주노총
사회대개혁 10대 과제
해설 자료**

1

한국 사회 내전 상황과 극우 청산의 중요성

광장의 힘으로 국민의힘 해체하고 내란 세력 완전히 청산하자!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으로 실패했지만, 오랜 기간 준비한 윤석열의 독재 부활 쿠데타는 끝나지 않았다.

87년 이후 대통령직선제와 평화적 정권교체가 진행되어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군부독재로 회귀 될 수 없음을 광장의 시민들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불평등과 혐오를 넘어 평등으로, 더 좋은 정치로, 시민의 삶을 바꿀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는 불충분하다는 점 또한 드러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옥중 편지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고 주장하며 폭력을 선동하고, 서천호 국민의 힘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는 등 극단적인 주장까지 펼쳤다.

"대통령의 계엄령 덕분에 저는 계몽됐습니다"라는 윤석열 측 변호인단,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국민의힘, 이를 지지하는 극우들의 공격성과 폭력성, 반민주적 선동과 궤변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수면 아래 꿈틀대던 극우 세력이 계엄과 탄핵 심판 국면에서 실체를 드러내며 한국 정치의 주요 변수로 급성장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깜짝 계엄 아니었다.

극우 파쇼 독재를 꿈꾸던 윤석열의 수많은 징후들..

2024년 총선 참패로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되었지만 윤석열은 전혀 국정 기초를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실과 각종 정부 기관 최고위층 인사가 가장 극우적인 인물들로 교체됐다. 몇몇 인사들만 되짚어 보아도 섬뜩한 전초전은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다.

방송통신위원장, 통일부 장관, 노동부 장관, 독립기념관장,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등 역사, 교육, 문화, 안보 전 분야 주요 기관장에 극우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극우 역사관이 국정운영의 공식 이념으로 될 것이라 우려하며 즐기치게 비판해왔다.



또한 윤석열의 계엄으로 가장 급부상한 세력은 다름 아닌 극우 유튜버들이다. 취임 초기부터 극우 유튜버와 친밀한 행보는 여러 차례 주목된 바 있다. 대통령의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 30여 명이 초청되는가 하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22년 8월5일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 대통령 윤석열이 휴가 중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계엄 발표 이후 극우 사상에 경도된 대통령의 실체는 부정선거 음모론 추종 발언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헌법재판소에서도 부정선거 주장을 줄기차게 늘어놓았다.

윤석열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극우 사상에 경도된 유튜버 중독자들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확장시켜 왔던 것이다.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칭하며, 부정 선거론을 설파했던 윤석열의 대국민담화는 극우 유튜버의 방송 대본과 정확히 일치했다. [한겨레21. 1543호. 고성국이 주문하자 윤석열이 대답...대통령 담회에서 '극우 유튜버' 음모론, 극우 유튜버 주장 100% 따른 윤석열 담회문]

극우로 장악된 국가기관, 계엄 이후 발톱 드러내 “인권위원장, 헌재 비난하는 서한 유엔 발송”

윤석열의 정치적 운명은 파면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그가 세상에 풀어놓은 극우적 시선은 국가기관을 통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만행이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극우 세력의 방패막이로 전락, 지난 2월 10일 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방어권 보장의 건'을 의결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은 각국 인권 기구 등급을 심사하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의 승인소위 사무국)에 헌법 재판소를 비난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내용인즉, '국민 절반이 헌법재판소를 못믿는다'라는 궤변을 담아 헌재를 비난한 것이다.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된 대한민국에서 인권위원장이 앞장에 서서 내란수괴를 옹호하며 반인권 국가임을 내세운 꼴이니, 그야말로 대 국가적 망신을 자행하고 있다.

'반법치주의 선봉'에 선 국민의힘, 극우 정당으로 타락... 극우 외에 기댈 곳 없는 처지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반법치주의적 메시지를 연일 남발하고 있다. 한남동 관저 집회도 모자라 헌법재판소로 몰려가 항의 데모를 하는 모습은 국민의 힘이 더 이상 정통 보수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급기야 극우 세력들과 긴밀히 결탁, 헌법재판소 판결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거짓 조작 뉴스'를 확산시키는데는 앞장 서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을 필두로 헌정질서 훼손과 극우 정치 행태가 폭력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급기야 극우

정치인 목사가 비상계엄을 비판한 국민의힘 의원을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정작 그들은 목사 앞에 고개를 조아린다.

대표적 보수 논객 조갑제 마저도 “헌재의 재판 과정은 아주 공정하게 진행됐다. 보수는 원래 헌법 수호 세력이다. 헌재에 승복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 국적 반납해야 한다. 또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세하고 있다는 게 지금 가공할 사태이다”며 맹비난에 나섰다.

국민의힘, '헌재 때려부수자' 발언까지 옹호?...극우 눈치보나 안철수마저 "강정 격양되면 그런 표현 나올 수 있어"...현동훈도 강성지지층 '어필'	"헌재 쳐부수자"는 국힘 의원...브레이크 없는 '극우화 폭주'
--	-------------------------------------

12.3 내란 이후 정통 보수층이 국민의힘을 떠나거나 이탈하면서 내부의 극우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헌재 국민의힘은 목적을 위해 법치를 무너뜨리고, 폭력 사용을 용인하는 극우 파쇼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극우에 기생하는 길 말고 살아남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제대로 된 보수 가치는 없었고 오로지 정권 창출을 위해 좋은 자리 나눠 갖기 등 입신양명에만 주력해 온 기득권 정당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윤석열의 파면 결정과 동시에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정당 해산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파면! 국민의힘 해체!

한국의 극우 세력, 어떻게 성장해왔나...

'혐오와 증오의 정치'를 바탕으로 성장

세계적으로 극우 세력은 주로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혐오'와 '증오'의 정치를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우리나라의 극우는 미군정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고착화되는 과정, 이념적 갈등 속에 탄생했다. 표면적으로는 '자유주의 가치'를 내세우며, 사실상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이승만 정권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해왔다. 극우 세력의 핵심은 '서북 청년단'과 같이 주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피해 남한으로 이주한 '지주'나 '기독교 세력'이었다.

끊임없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주장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사치이며, 남한을 적화시키려는 북한 공산주의 세력에 동조하는 주장이라고 매도해왔다. 주민자치 = 공산화, 빨갱이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펼치기도 했다.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극우는 반공, 반북주의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일부는 신자유주의자로 변신하여 노동을 억압하는 자본의 지배에 앞장서며 노조 = 빨갱이 논리로 진화했다.

또 이후에는 성소수자, 페미니스트, 이주민, 재한 중국 동포들을 '혐오' 대상에 추가하고, 집요하게 사회적 배제를 부추기며 극우 이데올로기를 형성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극우는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하고 장기간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1) 반공주의를 내면화한 노년층만 아니라 2) 성소수자를 죄악시키는 보수적 기독교인, 가부장적 남성 중심사회를 고수하며 성평등 운동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선동당한 3) 청년 남성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국민의힘-전광훈이 찾은 점점
반북·반공 이데올로기가 극우의 핵심,
여기에 반노조·반페미니즘·반성소수자 결합하여 동맹 확장

극우 세력은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 학계, 문화계 등으로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으며, 특히 개신교 극우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전광훈이 대표회장을 맡았던 한국 기독교 연합회를 비롯한 보수적 기독교 교단이나 사학을 매개로 극우 엘리트를 육성해왔다.

일명 '광화문 최고 사령관'이라 불리는 전광훈은 극우 폭동의 중심에 서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극우 개신교 신자들과 함께 각종 거리 집회를 주도하며 '아스팔트 극우'의 선봉에 선 전광훈은 어느새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쥐락펴락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다. 전광훈 집회에 국힘 의원들이 너도 나도 앞장서 참석하는 모습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이렇게 전광훈은 원내 진입을 시도하며 2020년 김문수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했고, 2023년 기준 당원 수가 26.6만명인 조직으로 성장 했다. 또한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며 그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 했던 김문수는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보수 정치인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윤석열의 계엄을 통해 '윤석열과 국민의힘, 전광훈'의 결합은 더욱 공고해졌고 서부지법 폭동을 계기로, 극우 파시즘이 극에 치달는 형국이다.

중국인 혐오를 필두로 한 인종차별,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 헌법재판소 파괴 기도 등 우리 사회에서 낯설었던 극우적 행보가 증폭되는 가운데, 앞서 밝힌 극우의 신념적 기반이 최근 들어 뚜렷하게 실증되고 있다.

무엇보다 반공 이데올로기이다. 한국 개신교의 상당수는 오랫동안 공산주의=반기독교=사탄이라는 등식의 강한 신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서 극단적 입장을 취하도록 했고, 윤 정권의 강경 대북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다음은 반성소수자와 반페미니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달랐다. 그는 중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우리 사회에 더는 조직적 성차별이 없으니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고 틈만 나면 강조했다. 더구나

평소 노골적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멈추지 않던 기독교계 안창호를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기독교계에 무언의 확신을 주었다. 보수가 과표 집 된 결과이긴 하지만 윤석열의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여 온 양상이나 이들의 결집은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양상이다.

수십 년간 반복된 반공 이데올로기, 강압적 국가주의, 소수자 혐오를 기반으로 확장된 그들의 토대 위에 윤석열의 계엄이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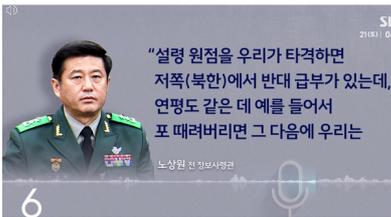
반노조·반여성·반성소수자·혐오와 차별이 지배하는 사회. 극우들은 어떤 국가를 만들고 싶은 것인가

**극우의 큰 그림,
독재 부활과 전쟁 가능한 국가 상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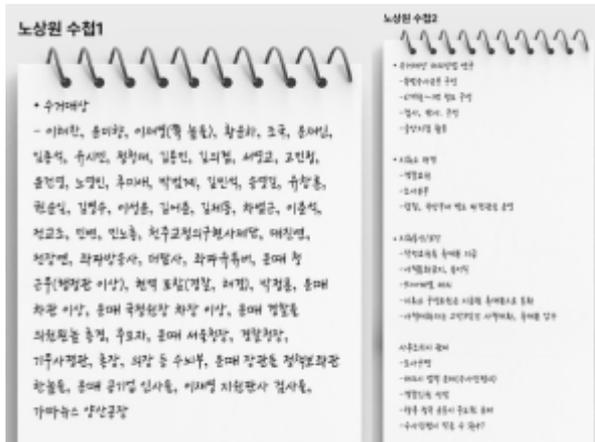
**MBC 앵커, 노상원 수첩 “전쟁유도 광기의 전모”
MBN 앵커 “사람이 재할용품?”**

방송들 '북 공격유도' '사살' '수거' '수인 수첩 집중 질타...국민의힘, 경찰 피의사실공표 문제 제기

노상원 "원점타격→北의 연평도 포격→평안타격 상황" 언급



노상원 전 정보사 사령관이 건강체포되기 전인 지난 14일 SBS 기자와 통화한 내용의 일부. (사진=SBS 모닝와이드 보도 캡처)



노상원 수첩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경고성 조치'가 아닌 철저하게 준비된 쿠데타 시나리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정권의 위기 탈출이 아니라 사후 조치를 통한 영구 집권 계획이었다.

수첩에는 『계엄을 장기화하고 영구 집권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겨 있었고, 『야당과 진보 진영을 제거하기 위한 '예비검속'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예비 검속은 '반정부세력으로 규정된 이들을 미리 체포해 계엄 이후의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다. 이승만의 보도연맹 학살, 1972년 박정희 유신 독재, 그리고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5·18 민중항쟁 진압 과정에서 활용된 이 방법은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장치였다.

체포 대상자는 민주노총, 전교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행정관 및 장관, 정책보좌관, 김어준 등 언론인, 김제동, 차범근 등으로, 이들을 A~D 등급으로 분류하고 '수거(체포)'한 뒤 '수집소'로 이송하는 구체적인 단계별 실행 방안이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포승줄 활용", "그룹별로 묶지 말고 섞어서 이동" 등의 표현은 조직적인 검속 작전이 계획되었음을 보여준다.

체포 이후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무인도 수용 후 제거', 'GOP에서 사살', '수장(수몰)', '폭파' 등 물리적 제거 방안이 포함되었고, 북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일부를 '북에서 조치'할 가능성까지 검토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출국 금지 조치, 계엄 장기화를 위한 '3선 개헌', '국회의원 수 축소' 등의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계엄이 단순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독재 체제 구축을 위한 시도였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권의 전략은 계엄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필연적인 선택으로 몰아가고자 했다. 북과의 충돌을 필연적인 상황으로 조성한 뒤, 이를 명분으로 국내를 철저히 군사적 통제하에 두려 했던 것이다. 예비검속 명단이 사전에 작성되었고, 탄핵이 진행되기 전부터 주요 인사들에 대한 감시와 군사적 대비가 진행된 사실은 이 전략이 단순한 권력 유지 차원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불평등 해결·노동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 대개혁이 절실
광장의 힘을 더욱 확장 시키자!**

주지하다시피 내란은 더욱 격렬하게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 위기에 몰린 윤석열의 돌발적인 시도가 아니라 한국 사회를 87년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해 온 사건이라는 것이 날날이 드러났다.

노동조합 지도자를 체포, 처단한다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계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조를 적대시해 온 윤석열의 그간 행태를 고려하면 저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전면 금지시켰을 것이다.

탄핵 투쟁 과정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은 극우 세력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폭력성이 현실화됨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반공주의와 사대주의에 빠진 일부 고령자들과 극단적인 기독교 세력에 국한되었으나 최근 들어 청년층까지 확대되면서 법원 폭동 사태까지 발발한 것이다. 또한 제도권 정당인 국민의힘이 거리의 극우 세력과 전면적으로 결합하면서 파시즘적 성격까지 강화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배타주의와 국가주의를 내세운 극우 세력이 주요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로 인해 대다수 노동자, 민중들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고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질서의 부분적 개량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삶이 개선될 희망이 없는 상황이 극우적 정치세력 성장의 토양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 또한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 되어 노동자, 민중의 부분적인 저항조차 계급적 타협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가 퇴행적 극우 세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자면 불평등 양극화 해결, 노동자·민중의 기본

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 대개혁이 절실하다.

극우 세력 청산은 내란 종식의 출발점이자 사회 대개혁 투쟁의 발화점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광장의 민주주의는 극우의 확산을 막고 직접 권력을 실험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윤석열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민들이 일터와 삶터,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폭발적 연대의 힘을 구축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저들을 압도할 힘을 공고히 구축하고 광장 민주주의가 지속·확장되도록, 중단없는 사회 대개혁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민주노총 사회대개혁안 해설

노동 중심! 사회 공공성 강화로 차별 없는 평등사회 실현

2대 목표 “노동 중심, 공공성 강화로 차별 없는 평등사회 실현”



[1]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 ①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생활 가능한 최저임금 보장
- ② 차별 없는 일자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성별 임금격차 철폐,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작업중지권 보장, 산안·산재법 전면 적용
- ③ 노동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 노조법 2·3조 개정, 초기업교섭 제도화,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노조 활동 행정개입 중단

[2] 사회 공공성 강화

- ① 불평등 타파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 조세 정의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감세 원상복구 및 누진적 보편증세, 공공성 강화와 복지 확대를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실현
- ② 보편적 기본서비스 확대 : 교육·의료·돌봄·주거·교통·에너지 등 필수사회서비스 강화. 공공의료 확대·공공돌봄체계 마련, 유급병가·상병수당 도입
- ③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회대개혁 10대 의제

- (1)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 (2)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구조 개혁!
- (3) 불평등·양극화 타파를 위한 사회공공성 강화!
- (4) 무상의료 실현 및 의료공공성 강화!
- (5)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 (6) 존엄과 공존의 성평등·인권 사회 구축!
- (7) 무상교육 실현 및 교육공공성 강화!
- (8) 평화체제 구축 및 자주적 사회 건설!
- (9) 민의 왜곡 없는 민주주의 사회 건설!
- (10)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식량주권 실현!

2대 핵심 과제 해설 “노동기본권과 사회 공공성 강화”

[1]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노동기본권의 보장 수준은 한 사회의 진보적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다. 노동자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만 사용자에 비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노조법 개정은 이미 21대, 22대 국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파면된 윤석열의 거부권행사로 입법이 완료되지 못했다. 실질 사용자의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노조법 개정을 통해 사내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5인 미만 사업장, 단시간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50만 명, 주15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노동자는 180만 명에 이른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연장·야간·휴일근무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남들이 쉬는 빨간 날에도 공휴일 유급휴가를 적용받지 못한다. 사업장 규모나 일하는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세 번째,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배달노동자, 학습지노동자, 택배노동자,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며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사실은 사업주를 위해 일하지만 사업주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노동계약 대신 사업계약을 맺는 위장된 노동자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권을 보장해야 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져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수수료를 보장해야 한다.

네 번째, 초기업 교섭·산별교섭을 제도화해야 한다.

재벌 중심의 한국경제구조에서 기업 단위 교섭은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이나 무노조사업장 노동자의 처지는 악화되기 마련이다. 산별교섭 제도화로 동일산업 내 노동자의 격차를 줄이고 미조직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

다섯 번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0%를 차지하며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대비 임금이 50~70%에 불과하고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여 정규직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여섯 번째,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보장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 산안법을 전면 적용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한 하도급 제한,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자의 판단과 작업중지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여나가야 한다.

[2] 사회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중 복지 확대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필수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가재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첫 번째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공공돌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가 지나치게 시장에 맡겨져 돈벌이수단으로 되고 있는 점이다. 어떤

나라에서도 개인이나 민간이 소방서를 운영하지 않는 것처럼, 병원도 마찬가지로 운영돼야 한다. OECD 국가 대부분 병원이 그런 것처럼 한국의 병원도 공공병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공공병상이 10%도 채 되지 않으며 공공병원 비중은 압도적으로 꼴찌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는 이윤에 급급해 생명중시, 공공의료를 방치하고 있는 한국 의료 현실을 고발하며 대중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한국의 의료 공공성이 부족함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한국 사회는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생·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영케어러’, ‘황혼육아’, ‘간병지옥’ 등 연령대를 막론하고 돌봄의 부담이 일반가정에 큰 압박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 돌봄시스템은 부실하고 그나마 있었던 사회서비스원을 폐쇄하여 돌봄을 개인의 책임,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을 복원, 강화하여 공적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서비스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두 번째, 교육·주거·교통·에너지 등 필수사회서비스를 공공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대학 서열화와 이로 인한 입시경쟁, 교육현장의 황폐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의무 교육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여 학생들이 학자금에 시달리지 않고 학업에 집중하여 사회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사회 불평등과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주거·부동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으로 수도권집중을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과도한 빚과 투기적 주택구입을 막아야 한다.

교통·에너지·통신 등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이동권 보장, 적정 에너지의 부담없는 사용, AI시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건강과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국민들은 과도한 사보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공적 성격이 약화되고 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 소득이 보장되기 위해서 보험료율 13% 인상, 소득대체율 50%라는 사회적 합의를 실현해야 하며 60%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유급병가제도·상병수당의 도입으로 국민 누구나 생계의 위협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네 번째,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을 강화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상속세, 증부세 등 각종 부자 감세로 세수 기반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2024년 30조 원의 세수 핑크 상황에도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2조 원 넘게 늘어나 6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 영업 실적 감소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대폭 감소해 62.5조 원까지 하락했다.

과세 형평성이 훼손되며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복지재정을 축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감세를 원상회복하는 것과 함께 누진적 보편증세를 통해 공공성과 민중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재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대개혁 과제

첫 번째, 사회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보수 양당의 정치독점을 깨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결선투표제,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검사가 특권 계급화되어 있는 현실을 청산하기 위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해소하고 검사장직선제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시민적 통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고 공천권자에게만 충성하는 정치인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정치인들 입맛에 맞는 법안만 심의하지 않고 국민이 발의하고 결정하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해야 한다.

두 번째, 평화 지향 자주적 중립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한반도의 분단과 군사적 대결은 위헌적 계엄 사태와 극우세력 발호의 근원이다.

극우세력이 탄핵 반대 시위에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를 흔드는 것은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친미사대주의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트럼프 정권이 보여주듯 미국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대표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 약소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나라일 뿐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추종해 대북대중 적대정책이 아니라 자주적 중립외교, 대북화해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세 번째, 존엄과 공존의 성평등·인권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빛의 혁명 과정에서 응원봉을 든 청년, 여성,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탄핵 투쟁에 서슴없이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폭력적인 소수자 차별에 대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평등한 사회, 이주, 장애, 나이, 성적 지향·성별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과 혐오를 받지 않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 국가인권기본법으로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번째, 기후 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기후 위기는 전 인류적 문제이며 우리나라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폭 상향해야 하며 공공의 주도하에 신속한 재생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불가피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와 권리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 번째,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식량주권을 실현해야 한다.

기후 위기로 인해 농업생산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트럼프발 무역전쟁은 우리나라의 수출제일주의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강제하고 있다.

국제경쟁환경의 변화는 에너지·농업의 자립과 자급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곡물자급률은 20%초반에 불과하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법제화하고 농업 말살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농업육성정책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보장해야 한다.